

민주, 日후쿠시마행 실효성 논란에 “손 놓고 있을 수 없어”

日유력 정치인·도쿄전력 담당자 면담 무산 “주일 한국 대사관 협조 없어...유감 표명”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6일부터 사흘간 일본 후쿠시마를 찾아 원전 오염수 방류 현황을 점검한다.

방일 일정을 강행한 것을 두고 여당을 중심으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일본 유력 정치인과 정부는 물론 방류 계획을 짰 도쿄전력 담당자 등과의 면담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현장 확인 국회 방문단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이번 방문단은 민주당 위성곤, 양이원영, 윤영덕, 윤재갑, 이용빈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된다. 전문 통역사와 인솔 가이드 등까지 포함하면 10명 정도로 꾸려질 계획이다.

방문 첫날인 5일에는 일본 내 시민사회 원전 안전 전문가들과 면담을 하고, 도쿄전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어 국내 언론사 특파원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후쿠시마로 이동

하게 된다.

6일 오전에는 후쿠시마 지방 의원과 원전 노동자 및 피난민들과의 만남이 계획되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후쿠시마 공동진료소 방문 일정이 잡혀있고, 이후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만나게 된다. 이 일정이 끝나는 대로 7일 새벽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온다.

이번 일정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도쿄전력을 방문할뿐 담당자와의 면담은 무산됐기 때문이다. 나아가 일본 유력 정치인과 만남 계획도 예정되지 않았다.

위 의원은 이에 대한 질의에 “현재까지 면담은 사실상 거부했지만, 요청서를 전달하면 받겠다고 했다”며 “앞서 도쿄전력에 방일단이 가게 되면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일본 공사에게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리한 정치인을 만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국민적 우려를 직접 보여주는 것 또한 중

요하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오래전부터 방일하겠다고 요청했는데 주일 한국 대사관도 협조하지 않고, 주한 일본 대사관도 협조하지 않았다”며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나”라고 거듭었다.

이어 “외국과 관계가 있는 문제니 공식적인 채널을 거치고 대표 통로를 통해서 일정이 진행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조만간 일본 지방선거가 치러진다는 점도 이번 방일 일정에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를 앞두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로 한국 국회의원을 만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양 의원은 “만나보려 몇 군데 접촉했고 의사를 가진 의원들도 확인했다”며 “다만 지금 시기가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 전에 만나기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기 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에서 나미오카 다이스케 주한 일본 대사관 경제공사를 만나 서한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위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가 후쿠시마 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해양방출대응단 위성곤 단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현장 확인 국회 방문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촉구 결의안을 6차례 발의했고, 4건이 통과됐다. 이는 일부 야당만이 아니라 모든 의원이 공감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며 “국민 안전과 영원한 행복을 헌법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염수가 부적절하게 처리될 경우 주변국 해양 생태계 산업과 안전에 많은 영향 미친다”며 “따라서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주변국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최이슬 기자

유경숙 강진균의회 부의장, 농협·수협중앙회 본사 전남 이전 촉구

농협·수협중앙회 전남 이전을 뒷받침할 농협·수협법 조속한 개정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본사를 농·수산물의 생산량이 가장 많은 전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강진균의회 부의장은 지난 30일에 열린 제289회 임시회에서 농협·수협중앙

회 본사 전남 이전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에서는 농협·수협중앙회 본사를 전국 최대 농수산물 생산지역인 전남에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국가균형발전 정부 정책 수립을 촉구

했다.

현재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본사를 서울특별시에서 둔다는 현행 규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겠다는 현정부의 정책과 상충되고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수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업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적임지인 전라남도도 농협·수협중앙회 본사를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전남은 전국 최대 농산물 생산지이자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생명 분야 공공기관의 집적지이다. 또 농업인의 수는 2021년 기준 29만 551명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많고 전국 농작물 생산량의 19%를 차지한다. 수산물생산량은 59%, 생산액은 39%로 전국 1위다.

하지만 해양수산 공공·유관기관은 주로 수도권(11개)에 집중돼 있다. 이런 여건 때문에 농협과 수협중앙회 본사를 전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강진=김영일기자

전남도의회 최명수 의원, ‘마한사 역사 교과서 확대 반영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영산강 유역을 기반으로 독창적인 문화를 꽃피웠던 마한이 한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사적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마한사 역사 교과서 확대 반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에 마한의 역사를 밝힐 수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이 발굴되고, 마한이 우리 고대사의 한 축을 이루었던 사실이 속속 밝혀지면서 마

한의 역사를 새롭게 이해하고 규명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마한의 중심지인 영산강 유역에는 세계 유례없는 대형 전용용관을 사용하는 수심 기의 대형 고분이 밀집되어 있고, 금동관과 금동신발 등이 확인되고 있어 강력한 왕국의 존재를 웅변하고 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마한 관련 서술은 극히 미미하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고대국가로 발전하고 있던 4~6세기에는 단 한 줄도 서술되지 못하고 있다.

최명수 의원은 “마한과 비슷한 시기에 멸망한 가야사가 삼국시대 역사에 버금가는 비중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과는 비교되는 대목이라 상대적으로 남들하기 어렵다.”면서 “고대사에서 소외되고 잊혔던 마한의 역사를 교과서에 제대로 반영해 한국 고대사를 정립하고 자긍심을 고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나주=송준표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